

## 제226호 (2009. 9. 28)

---

### ■ 경제 동향

- 2010년 국내 경제 4%내외 성장 전망

### ■ 정책·경영

- 입찰자격 사전심사(PQ)의 변별력 합리화 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공모형 PF사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분석

### ■ 정보 마당

- 일본 건설투자 1995년 이후 감소세 지속

### ■ 연구원 소식

### ■ 건설 논단 : 새로운 길...건설과 IT의 융합

## 2010년 국내 경제 4%내외 성장 전망

－ 올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 다소 둔화, 내년에는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 예상 －

### ■ 국내 경제, 최근의 빠른 경기 회복으로 기존 전망치 상향

-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의 최근 전망에 의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1.0 \sim -0.6\%$ 의 성장률을, 내년에는  $3.9 \sim 4.2\%$ 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것은 상반기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임.
  -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올 2월 저점을 찍고 회복 국면으로 돌아섬.
  - － 회복 추이도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하반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빠른 속도를 보임.
- 상반기에 집중된 정부 재정 지출이 빠른 경기 회복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됨.
  - － 정부 예산 272.7조원 가운데 8월까지 199.3조원(73.1%)이 투입되었음.
  - － 국내 경기의 빠른 회복에는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된 SOC 예산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됨(주요 지표 중 건설투자만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 <최근 국내 연구기관이 발표한 GDP 전망치>

(단위 : 전년 대비 증감률 %)

기관	연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실업률
KDI (9월 8일)	2009	-0.7(-2.3)	0.2	3.9	-9.6	-14.0	-23.6	2.8	3.8
	2010	4.2	4.2	2.0	13.8	15.7	21.0	2.7	3.5
삼성경제연구원 (9월 16일)	2009	-0.8(-2.4)	-0.3	2.8	-12.3	-15.7	-25.4	2.8	3.7
	2010	3.9	3.1	1.9	8.2	12.2	17.8	3.0	3.5
LG경제연구원 (9월 23일)	2009	-0.6(-1.7)	-1.4	2.8	-11.5	-14.8	-26.3	2.9	3.6
	2010	4.2	3.7	3.2	8.1	15.0	23.7	2.7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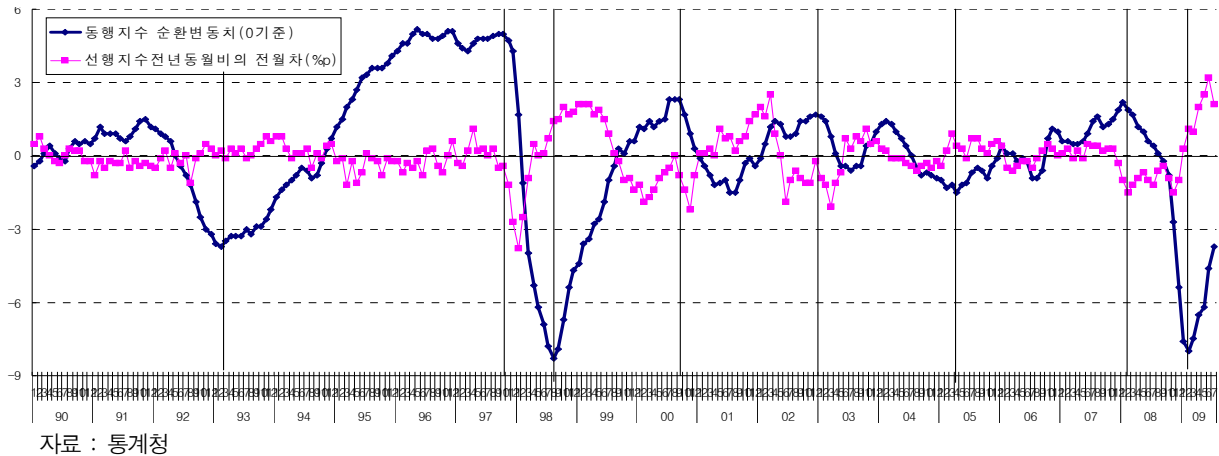
주 : GDP 항목 괄호 안의 수치는 지난해 전망치임. 수출과 수입의 경우 통관 기준임.

### ■ 올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 다소 둔화 전망

- 상반기에 경기 회복을 주도한 재정효과가 연말에 감소하고 민간 소비도 다소 완만한 속도로 살아남에 따라 경기 회복 기조는 유지하되 그 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
  - － 재정 지출의 경우 8월까지의 월평균 25조원 수준이었는데 9월부터는 월평균 18.4조원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특히 4/4분기 재정 집행 효과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임.
  - －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취업자 수가 8월에 소폭 증가세로 반등(+3,000명)했으나, 제조업부문의 감소세가 지속(-13만 8,000명)되고 있어 여전히 내수가 부진한 상황임.

- 높아진 가계부채 수준과 점진적으로 증가할 금리로 소비 회복 속도가 상반기에 비해 둔화될 전망으로, 올해 민간 소비는 전년 대비 소폭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큼.

&lt;국내 경기 변동 추이&gt;



## ■ 내년도 수출 회복이 경제 성장의 관건

-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설비투자가 올해 내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렵고, 내년에야 이전 수준이 가능할 전망이다.
  - 비록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되었지만 금융 부실의 근본 문제 미해결과 선진국의 재정 적자 문제, 자산 버블 붕괴로 인한 더블 딥 위험 등 여러 불안 요소가 여전히 상존함.
  -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올해 안으로 본격 회복하기는 어려워 10% 수준의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이며, 내년이 되어야 2008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 건설투자는 기저 효과로 미미한 증가세에 머물 전망
- 결국 세계 경제 회생에 따른 수출 회복이 내년 국내 경제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내년에는 재정 확대가 어렵고 내수에 의한 소비와 투자 회복이 한정적일 것임을 감안하면 결국 수출 회복이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임.
  - 올 하반기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선진국들과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빠른 경제 회생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수출이 10~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증가에 따른 제조업 중심의 생산 활동 증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박철한(연구원 igata99@cerik.re.kr)

## 입찰자격 사전심사(PQ)의 변별력 합리화 방안

－ 대중소업체 간 상생(相生) 고려 필요, 체급별 입찰이 전제되어야 －

### ■ 정부, PQ 변별력 강화 추진 : 입찰 참가자 수 인위적 축소 예상

- 최근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되고 있는 사전자격 심사(PQ : Pre-Qualification)의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PQ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 정부는 현행 PQ 평가 항목 및 배점의 변별력이 부족하고, 공사 종류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곤란하며, 업체의 기술 개발 및 전문화를 유인하는 기능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
- 현재 공공공사 입찰에는 보통 30~40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PQ 심사의 변별력을 강화하게 되면, PQ를 통과하는 업체가 십여개사로 크게 줄어들 전망
  - － 현행 체제하에서는 대형 업체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건설업체의 민원이 증가될 수 있음.
  - － 따라서, PQ 심사의 변별력을 강화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고려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적합한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만이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구상해야 함.

### ■ 시공실적의 공종별 특화도 평가 필요

- 동일 공종, 유사 공종, 총 공사실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기술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 공종에 대한 시공경험 여부를 중시해야 함.
  - － 단순한 시공경험보다는 특수한 공법이나 시공을 해본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변별력을 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 예를 들어 교량 입찰에서는 콘크리트 교량인지 아니면 강교(鋼橋)인지 구분이 필요하며, 교량의 종류나 시공 방법에 따라 PQ 평가 항목을 달리할 수 있으며, 터널공사 입찰에 있어서도 쉴드머신(shield machine) 적용 실적이나 연약지반 혹은 해저 시공 경험 등 공사 입지 등에 대한 평가도 가능할 수 있음.
  - － 해당 공사와 연계된 신기술 보유나 기술개발실적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야 함.

- 양적 실적도 중요하나, 부실업체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기(既) 수행공사의 계약 이행이나 공사관리 실태, 부실공사 여부 등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중시하여 평가해야 함.
  - 신인도 평가에서는 직접시공 실적을 우대하고, 동일 공종의 건설 재해나 안전 사고에 대하여 더 큰 감점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됨.
- 단순히 시공실적만을 평가하게 되면 대형 업체에게 유리하게 됨. 그러나, 시공실적의 공종별 특화도를 동시에 평가하면 대형 업체에 반드시 유리하지 않으며, 일반건설업체의 전문화특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특정 공종(예. 지하철 공사)에 특화하여 집중 수주하고, 관련 기술인력과 핵심기술을 확보한 업체는 대형 업체와 동등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여 가능
  - 대형 업체나 중소기업 구분 없이 특정 공종에 수주를 집중한 회사가 이익을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반건설업체의 전문화특화를 유도할 수 있음.
- 기술자 평가에 있어서는 해당 공종의 경력 기술자를 매우 중시하고, 단순한 기술자 보유 현황보다는 해당 공사에 투입 예정인 핵심기술자를 평가해야 함.
  - 또한, 당해 공사에 특화하여 기술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수 공법 및 기술의 보유 여부나 하도급 협력 관계를 중시할 필요성이 있음.

#### ■ PQ 변별력 강화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 : 체급별 경쟁 강화해야

- PQ 변별력 강화 정책을 시행하려면 체급별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공공사의 입찰 경쟁 구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조달청 군(群)제한 경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 이상을 1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략 상위 179위까지 1군으로 구분돼 있어 대형 업체와 중견 업체가 혼재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있음.
  - 만약, 179개사에 달하는 1군 업체를 20~50여 개사로 더욱 세분화하여 체급별 경기를 강화한다면, PQ 변별력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PQ 항목이나 배점을 획일화하지 않고, 공사의 규모나 난이도에 따라 PQ 통과 점수가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발주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져야 함.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 “稅혜택 폐지시 PF사업 중단위기, 현행체제 유지가 바람직”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공모형 PF사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분석 －

### ■ 금융위기 이후 공모형 PF사업의 동향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 건설업계는 2008년 중반 이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PF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으며, 발주처들도 대부분 사업을 유예함.
  - －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의 금융협상에서 CI(건설시공참여자, construction investors)와 FI(재무적투자자, financial investors)의 이견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에 난항
  - － 신규 사업의 경우 2008년 이후 8건의 유찰과 예정 사업의 무기한 지연 사태 발생
- 경제상황이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부동산 경기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하반기 이후 공모형 PF사업의 공모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그러나, 분양가상한제와 비합리적인 리스크 분담 구조 등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 더욱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한 세금 혜택 폐지 문제까지 발생하여 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세수확보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PFV)에 보장하던 취득등록세 감면규정 폐지를 검토 중
  - － ‘2009년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서 PFV(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회사,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며, 9월 말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
  - － 2004년 법인세 개정 이후 현재 대부분의 공모형 PF사업은 PFV 구조로 추진 중

### ■ 세금감면 혜택 폐지시의 문제점

- 현재의 계획대로 3년 후에 취득등록세 감면규정을 폐지할 경우 대부분의 공모형 PF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짐.
  - － 대부분의 공모형 PF사업이 3년 내에 종료될 수는 없으므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조건으로 추진된 모든 공모형 PF사업의 수익성 악화 및 투자자 이탈 예상

- 현재 시점에서 폐지됨을 가정할 때 1.3%~2.38% 정도 수익률이 감소(용산역세권 -2.10%, 상암DMC -1.74%, 천안국제비즈니스 -1.80% 등)
- 취득등록세 감면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폐지됨을 가정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주요 19개 PFV사업의 제세금 부담이 1.9조원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 현행 1조 1,433억원 → 폐지시 3조 912억원
-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세제감면을 사업 추진단계에서 박탈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경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법률적 안정성을 저해시킴.
  - 진행 중인 PF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건설사는 PF 보증채무 상환 부담으로 경영난이 초래될 수 있으며 금융 부문도 동반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 장기적으로도 공모형 PF사업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저해함으로써 공익에 손실
  - 정부재정의 한계를 감안,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부의 기본적 정책 방향과 배치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정책 방향

- 세금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세금감면 혜택을 전제로 추진한 사업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부작용이 큼.
  - 향후에도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인책으로서 존속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는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법 제정 및 조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한 기준 및 근거가 미비함.
  - SOC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하게 공모형 PF사업의 제반 사항을 규율하는 가칭 「공모형 PF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법령, 기본계획, 표준협약(안) 등으로 구성)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유사하게 공모형 PF사업의 타당성 검증, 사업형태의 결정, 개발의 효율성 분석 및 사업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조직 체계를 검토

이승우(연구위원-swoolee@cerik.re.kr)

## 일본 건설투자 19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

### ■ 2009~2010년 건설투자, 지속적인 감소 전망

- 일본의 2009 회계연도 기준 건설투자는 2008년과 비교하여 2.9% 감소할 것으로 예상. 기록적인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건설투자는 1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주거 부문의 민간 투자는 경기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가파르게 하락하여 6.9% 감소하고, 비주거 부문의 민간 투자도 16.2% 감소할 것으로 보임. 비주거 부문의 민간 투자 중 건축 부문은 20.4%, 토목 부문은 7.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09년에는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은 가능하나 기업들의 자발적인 건설투자가 확대되지 않아 건설투자 환경은 내년에도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
  - 기업의 자본투자는 회복 여부가 불명확하나, 정부의 건설투자는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이 확실함에 따라 큰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는 2010년 건설 부문 투자를 감액하고, 추가적인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총 건설 투자는 2009년에 비하여 3.6% 감소할 것이며, 정부의 건설 투자 또한 1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 회복에의 기대감으로 주거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는 2009년에 비해 6.6% 증가할 것임.
  - 비주거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는 기업들의 자본 투자가 건설투자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0.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비주거 건축 부문에 대한 투자는 0.5% 감소하는 반면, 토목에 대한 투자는 0.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2010년의 일본 총 건설투자는 44조 1,600억엔으로 예상됨. 이는 1979년의 47조 9,219엔 보다 오히려 더 줄어든 수치임.
  - 더욱이 일본 정부의 건설투자는 1995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이는 경기 버블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건설투자를 지속적으로 줄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lt;일본의 건설투자 추이&gt;

(단위 : 100만엔)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sup>1)</sup>	2010년 <sup>1)</sup>
명목 총 건설투자 (연간 성장률)	814,395 11.4%	790,169 0.3%	661,948 -3.4%	515,676 -2.4%	513,281 -0.5%	458,400 -2.9%	441,700 -3.6%
명목 건설투자(정부) (연간 성장률)	257,480 6.0%	351,986 5.8%	299,601 -6.2%	189,738 -8.9%	177,965 -6.2%	193,600 11.3%	167,300 -13.6%
명목 건설투자(주거) (연간 성장률)	257,217 9.3%	243,129 -5.2%	202,756 -2.2%	184,258 0.3%	187,499 1.8%	148,300 -6.9%	158,100 6.6%
명목 건설투자(비주거) (연간 성장률)	299,698 18.4%	195,053 -1.8%	159,591 0.7%	141,680 4.0%	147,817 4.3%	116,500 -16.2%	116,300 -0.2%
실질 건설투자 (연간 성장률)	840,446 7.6%	777,268 0.2%	661,947 -3.6%	515,196 -3.4%	506,003 -1.8%	439,600 -0.8%	423,700 -3.6%

주 1 : 추정치임.

자료 : 일본건설경제연구소(RICE)

## ■ 정권 교체에 따른 일본의 건설투자 전망

- 최근 정권을 이양받은 일본의 민주당은 정부의 건설투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
  -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은 초대형 건설사업인 안바담 공사의 중지를 명령했음. 1952년부터 추진돼온 안바담 공사는 4,600억엔의 총 사업비 가운데 이미 3,217억엔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임. 민주당은 이 공사가 자민당과 관료, 건설업체의 3자 유착으로 이뤄진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라고 지적해왔음.
  -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향후 일본 정부의 건설투자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큼.
- 일본 정부가 매년 3%씩 건설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총건설투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여도는 2010년 기준 37.9%로 예상됨.
-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의 경기는 내수와 해외 부문에서 회복을 기대하고 있어 공공 부문의 건설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건설투자는 민간 부문에 의존하여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박성민(연구위원.smpark@cerik.re.kr)

##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9.18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자문회의에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li> <li>국토해양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관련 전문가 참여. 소규모 복합공사의 시공권에 대한 논의</li> </ul>
9.25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관련 자문회의에 김우영 연구위원 참여</li> <li>건축 분야의 BIM 적용 및 활성화 방안 관련 자문 수행</li> </ul>

## ■ 신규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재개발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정부나 국회 등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추진 중</li> <li>이 법안들은 공공 개입 강화로 인한 부작용 및 소유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가중 초래. 또한,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은 변칙적 공영개발방식의 확장에 불과하며, 조정효력도 실효성 부재한 상황. 현실성도 부족</li> <li>도시 전체의 지속 발전의 틀 속에서 정비 사업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li> </ul>
	입찰자격 사전심사(PQ)의 변별력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PQ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별력이 부족하고 공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곤란하며, 업체의 기술개발 및 전문화를 유인하는 기능도 미흡</li> <li>PQ 심사의 변별력을 강화하되 해당 건설공사에 적합한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만이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 구상 필요</li> <li>특히, 시공경험 분야는 기술력 평가를 위해 동일 공종에 대한 시공경험 여부를 중시할 필요가 있음.</li> </ul>

## ■ 신규 연구과제 현황

	주요 내용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개선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의 개선방안 중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부정적 공종 수에 관계없이 최저가입찰자부터 심사토록 하여 사실상 저가심의(Ⅰ) 방식을 폐지하는 방안 추진</li> <li>본 연구는 저가심의(Ⅰ) 방식 폐지에 따른 업계 영향과 덤핑입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li> </ul>

## ■ 기타 연구원 활동

### • 2010년 연구과제 제안 안내

- 건설제도 및 정책, 건설경영, 건설사업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본 연구원은 외부 수요에 부응하는 실용적 연구를 강화하고자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학계, 연구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0년 연구과제를 제안받고 있음.
- 제안처 : 연구원 기획팀(2009. 10. 9(금)까지)
- 문 의 : 기획팀(02-3441-0815).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http://www.cerik.re.kr)) 참조

## 새로운 길...건설과 IT의 융합

기술의 발전과 시장수요의 다양성은 건설산업이 향유하고 있는 현재의 기술체계와 수익모델 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IT가 건설산업에 접목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며, 생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건설시설물의 기능에도 첨단 IT상품이 도입되고 있다. u-City나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시장은 소위 IT와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되었으며, 건설산업은 기존의 사고와 대응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받고 있다.

건설산업은 이 신규시장이 첨단 IT 상품의 도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전기설비분야의 업무로 판단하고 있다. IT산업은 이를 블루오션이라 하여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시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는 u-City나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복잡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건축과 도시공간이 가지는 특성에 첨단의 IT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인간의 삶과 사회·문화적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재하다.

지자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u-City는 도시 시스템과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였다기보다는, 첨단 IT 상품의 도입만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IT산업의 시장만을 강조하게 되고, 사회·문화·경제적 시스템의 뒷받침이 없는 모래 위의 성을 쌓은 모양이 되고 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도시를 구상함에 있어 최첨단의 기술에 우선하여 u-City로서 도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프라와 시스템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u-City이자 녹색도시로 계획되고 있는 UAE의 마스다르는 최첨단 기술을 가진 IT 업체나 녹색산업 업체들보다, 도시라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기획할 수 있는 건설전문가들이 중심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근 국내의 교통카드를 전국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가 있었다. 매우 단순한 문제인 듯하지만 지역적으로 제한되었던 이런 교통카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주체들간에 크로스오버되는 장애요인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첨단 IT 상품이 들어가더라도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융합기술이며 사회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융합의 주체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종합적인 기술을 다뤘은 건설산업의 역할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u-City나 스마트 그리드는 이 시대가 건설산업에 던지는 새로운 숙제다. u-City나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의 사업영역과 시장구조에 묶인 사고의 틀을 털어내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u-City나 스마트 그리드 같은 첨단의 새로운 도시시스템은 기존의 산업체계가 아닌 제3의 주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김우영(연구위원·beladomo@cerik.re.kr)